"백신 제조사 부작용 면책규정 제출 거부"

최춘식 의원 자료요구에 거부
"일방적 백신패스는 살인행위"

최춘식(국민의힘, 포천 · 가평 · 사진) 국회의원은 정부가 올해 4차 접종 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계약서상 부작용 발생에 대한 제조사 측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규정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 '신규도입 계약 9000만회분의 제조사별 계약서 사본과 제조사의 부작용 면책 규정 존재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을 계약 완료한 동시에 국산백신 1000만회분의 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제조사 측과의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면책규정 제출이 어렵다면 면책규정에 대한 존재 여부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질병관리청은 답변을 거부했다.

최춘식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규도입 9000만회분 백신 구매를 위해 이미 지난해 8월13일 화이자 3000만회분, 11월5일 화이자 3000만회분, 12월22일 모더나 2000만회분의 계약을 완료했으며 국산백신 1000만회분은 현재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총 9000만회분 백신 도입을 위해 올해 약 2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1~3차 접종을 완료한 기존 백신에 대해서도 부작용 면책규정을 포함한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백신이 개발되기 전인 재작년의 경우 서둘러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부작용 면책규정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데도 면책규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부작용 면책규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4차 접종과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백신패스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재학 기자

양산고 설립추진 주민협의체 회의 열어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
고등학교 수용률 해결을

고등학교 수용률이 매우 낮은 김포한강신도시에 양산고등학교 설립이 주민과 함께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이기형(민주당, 김포4 · 사진) 의원은 지난 11일 '(가칭) 양산고등학교 설립추진 주민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중학생 졸업자 수 대비 고등학교 수용률이 매우 낮은 한강신도시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으로 '구래-마산동' 지역의 고등학교 1곳 추가 신설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중학교 졸업생 수 대비 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60% 대에 머물고 있어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이 많아 교육환경 저하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다행히 2021년 하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한강신도시 내 '(가칭) 운일고등학교'의 설립안이 통과돼 2024년 개교 추진 중이지만 가파른 취학인구 증가와 함께 중학교 졸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등학교 진학은 멀고도 험한 일이 되고 있다.

이기형 도의원은 현황 설명과 추진계획 논의에서 '2021년 (가칭) 양산고 설립 추진 1차 주민협의체 회의 시 2022년 1월 추진계획 등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에 추진계획을 요구했고 올해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 추진 의지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 심의'와 '자체투자심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의 학교설립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있어서 2020년 38.6%와 2021년 64.6%로 최근 통과 비율이 높아졌으나 이는 신규 택지 입주에 따른 것이 대부분 이어서 고등학교 설립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협의체에 참석한 구래동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신모란 회장과 호수초등학교 이민정 학부모회장은 "고등학교 설립추진에 여러 난관이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지만 지역 현실은 고등학교의 개교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학교 졸업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취학을 앞둔 학생과 초등학생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운일고등학교가 교육부 투자심사 상정 5회(2012년부터 추진)만에 통과된 예를 들며 "고등학교 설립이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김포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시련이 있더라도 주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칭)양산고등학교 설립추진은 다음달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교육청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고교설립의 1차 관문에 도전할 예정이다. 김인창 기자

하남 6개교 환경개선비 예산 확보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민주당, 하남2)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하남시 6개교가 선정됐다.

특히 원도심 중심의 하남초 · 창우초 · 신장초 · 신평중 · 애니고와 한홀초가 선정됐으며 대다수가 노후화 장실개선비와 배수로 및 포장, 전기공사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확보는 학교장들과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얻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찾아가는 학교현장' 탐방을 통해 시설노후화 대책과 학생안전에 초점을 둔 결과로 보인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시돼야 하며 학교의 공간이 집과는 사뭇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같은 공간의 느낌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특히 안전에 중점을 뒀기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시민 함께하는 연구성과 전시·발표회' 개최

인천시의회·인천연구원
연구·소통하는 의회 구현
지난해 연구 성과 공유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와 인천연구원이 '연구하고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그동안 활동한 여러 결과물을 인천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두 기관은 '제277회 임시회' 회기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6일간 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성과 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들과 인천연구원 연구자들이 수행한 2021년 연구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해 시정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감,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서는 의원연구단체들의 올해 연구활동 계획과 함께 지난해 1년 동안 펼친 연구활동 성과 소개, 발간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전시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인천연구원에서도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 및 단행본 80여 편을 비롯해 시정 관련 연구보고서와 단행본 도서를 다양한 전시매체(영상모니터 · 터치스크린 · 태블릿PC · 전시패널 · 배너 · 리플렛)를 동원해 콘텐츠로 제작한 연구과제 동영상 · 인포그래픽스 · 카드뉴스 · 뉴스레터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일 오후 1시부터는 행사 개회식과 발표회도 기획돼 있고 온라인 생중계된다.

여기서는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조성혜 위원장이 의원연구단체의 2021년 연구활동 성과와 2022년 연구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인천연구원의 윤하연 연구기획실장과 채은경 전략분석팀장은 각각 2021년 연구성과와 미래전책연구단 성과(인천의 현재와 미래 변화를 위한 '인천 아젠다 30')를 소개한다. 안종삼 기자

의회 단신

안산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논의

안산시의회 274회 임시회

송바우나 의원.

이기환 의원.

안산시의회가 제27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최근 공고한 의사일정을 통해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74회 임시회에서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이 ·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라고 밝혔다.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시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하며 직업상담 · 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표 발의자가 이기환 의원인 '안산시 이 ·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 · 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업계 종사자에 안정감을 부여하면서 고용 창출을 늘리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가 이 · 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 · 교육 · 훈련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이 담겼다.

임시회 의사일정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이 · 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가 각각 17일부터 20일까지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두 조례안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21일 개최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의회는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김대영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으로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3명에 대한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했다. 〈사진=인천 부평구의회〉

인천 부평구의회 인사권 독립 닻 올려

임용장 교부식 열려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으로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3명에 대한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장 교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7일 부평구와 인사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회 인사권 분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부평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위 자치법규에 대한 제 · 개정 및 의회 소속 직원 구성에 필요사항을 추진하는 등 향후 독립된 인사사무 관리를 위해 지방의회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예정이다.

홍순옥 의장은 "부평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율성이 확보되고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과 소통하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홍일 기자

여의도 소식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당정 주최

김영배 의원

17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TF 김영배(서울성북갑) 단장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긴급 당정'을 주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 산업재해 예방 TF 단장 김영배 의원과 총괄간사 안호영 의원, 운영간사 이수진(비례) · 민형배 · 이해식 · 홍기원 · 장경태 · 장철민 의원 등은 정부 측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 행정안전부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청 진교훈 차장, 광주광역시 김종효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 서구청 김순옥 부구청장과 함께 긴급 당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산업재해 예방 TF 김영배 단장은 17일 발언에서 "지난 11일 광주 서구 신축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실종자 다섯 분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있으니 정부와 관계기관은 속도감 있는 수색과 안전한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한 후 현재 건물의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해 현장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최우선 해주기를 거듭 당부했다.

또한 "현재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 217일 만에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봉 기자

건물 화재·붕괴 막기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김교흥 의원

김교흥(민주당, 인천 서구갑) 의원은 17일 건물 화재 · 붕괴를 막기 위해 창고 · 주상복합건축물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창고를 지을 때 건축주가 감리자를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가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구청장 등 허가권자가 지정해 감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 감리의 경우 주택감리 경험이 없는 자도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했지만 주택공사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 건설공사처럼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자 선정은 세 단계가 있는데 건축주가 직접 지정, 허가권자가 지정, 허가권자가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점수를 종합해 적격심사를 거친 뒤 감리자를 지정하는 순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김 의원은 "최근 평택 물류창고 등 부실 감리에 따른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감리자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창고 · 주상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감리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종삼 기자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도입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배준영(국민의, 인천 중구 · 강화 · 옹진) 의원은 17일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인 · 노인가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지속 증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12월 '수의사법'이 개정돼 앞으로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동물병원 진료비용 의무 게시 및 현황 조사 · 분석 등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됐다"며 "이에 발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등과 동일하게 동물병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반려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와 고양이 뿐 아니라 토끼 · 페럿(족제비과) · 기니피그(쥐와 유사한 동물) 및 햄스터가 포함된다. 안종삼 기자